

흔들리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 시위로 보는 중국의 미래

작 성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장윤미 (dochi@daum.net)

목 차

1. 시위의 경과
2. 시위의 배경과 홍콩의 불평등
3. 쟁점 1: ‘일국양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4. 쟁점 2: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
5.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강경하되 법에 따라”
6. 평가 및 전망

-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입후보자 자격을 제한한 전인대의 선거 안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반발이 2014년 9월 22일부터 홍콩 24개 대학교 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시작으로 대규모 항의시위로 나타났음
- 155년간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서구와 아시아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 홍콩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港人治港)”는 자치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 시위의 경과, 배경 등을 탐색하고 '일국양제'향방,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이후를 전망함

-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입후보자 자격을 제한한 전인대의 선거 안에 반발하는 홍콩 시민들의 점령 시위가 벌써 한 달째로 접어 듬. 2014년 9월 22일부터 홍콩 24개 대학교 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하면서 시작된 이번 시위는 28일 홍콩 금융 중심가 센트럴을 점거하면서 본격화됨
- 이번 시위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8월 31일 통과시킨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보통선거문제 및 2016년 입법회 구성방법에 관한 결정』에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결정에서는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보통선거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행정장관은 반드시 애국인사가 말아야 하며 2017년부터 보통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명위원회는 유일한 제명 기관으로 2~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모든 후보자는 제명위원회 전체위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1인1표 방식으로 행정장관이 선출된 이후에는 중국 대륙에서 임명한다. 2017년 행정장관 선거방법이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2012년의 선거방법을 적용한다.”
- 처음에는 월가 점령 시위를 본 딴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센트럴 점령(Occupy Central with Love and Peace)'이라는 시민단체가 주도

하는 대학생·지식인 중심의 시위였으나, 현재는 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지지까지 합류한 홍콩 전체의 시위가 됨.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위는 경찰의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아내 우산 운동 또는 우산 혁명(umbrella revolution)이라고도 불림

- 서구에서는 홍콩의 민주시위를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시위로 보면서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압박하고 있음. 대표적인 서방 매체인 <타임지>에서는 학생운동을 이끌고 있는 17세 소년 조슈아 Ying(黃之鋒)을 타임지의 커버 인물로 선정하기도 하며 홍콩 시위의 향방에 관심을 보임
- 반면 중국 정부는 홍콩의 일은 중국 내정에 속한다고 선포하며 서구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중국 매체나 학계에서도 홍콩시위는 ‘양제’를 가지고 ‘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안정없이 홍콩의 발전도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기에 바쁨
- 155년간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서구와 아시아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 홍콩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港人治港)”는 자치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1. 시위의 경과

■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一國兩制)’에 관한 백서 발표

- 2014년 6월 10일 중국 국무원이 2만3천자에 달하는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일국양제의 실천』 백서를 발표함. 백서에서는 “외부세력이 홍콩을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경계함”과 일찍부터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행정장관은 국가와 홍콩을 사랑하는(愛國愛港) 애국인사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또한 백서에서는 고도 자치하의 홍콩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는지의 여부는 “중양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부여하는지에 달려있으며”, ‘일국양제’에서 ‘일국’과 ‘양제’는 결코 평등하지 않고 ‘일국’은 전제이며 ‘양제’는 종속적이라고 거듭 표명함. 즉 중양이 홍콩에 대해 ‘전면적 관치권(管治權)’을 갖으며 홍콩은 지방사무 관리권만을 갖는다는 것임
- 중국정부의 백서에 항의하며 센트럴 점령 운동본부에서 시민투표를 실시함
 - ‘센트럴 점령’ 본부가 주도한 민간투표가 홍콩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6월 29일 막을 내림. 투표를 주관한 홍콩대학 민의연구계획(香港大學民意研究計劃)은 중복투표를 제외하고 모두 78.7만 명이 투표했으며, 민주적인 보통선거 방안이 가장 많은 득표를 보여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고 발표함
 - 시민투표 주최 측은 홍콩정부가 투표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존중해 줄 것을 호소함. 그러나 중국 관방매체에서는 투표 자체가 ‘애국’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홍콩의 친중국 매체들 역시 투표에 허점이 많았다고 선전함

■ 홍콩 7·1 거리시위

- 홍콩 회귀 17주년 기념일인 2014년 7월 1일 오후3시 ‘7.1’ 대시위가 시작됨. 보통선거 쟁취운동 참가자는 거의 80만 명에 달했고, 학생단체는 철야 ‘시민 불복종(公民抗命)’ 운동을 발기한 뒤 계속 행동하기로 결정함. 장소를 두 곳으로 나누어 점령 운동을 진행하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로 함
 - 7월 15일 홍콩정부는 정치개혁자문보고를 선포했고, 행정장관 령춘잉(梁振英)은 전인대 상무위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보고서에는 홍콩시민의 민주선거에 관한 의견을 분명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옴

■ 8월 전인대,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최종 결정함

- 8월 31일 전인대 상무위 제10차 회의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보통선거문제 및 2016년 입법회 구성방법에 관한 결정』을 통과 시킴. 『결정』에서는 홍콩 행정장관은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고 홍콩을 사랑하는 인사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힘
 - 전인대 상무위는 “후보자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과반수)의 지지를 통해 추천한다”고 결정하면서 추천위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2~3명의 행정장관 후보자를 낼 수 있도록 함. 이른바 “각계 각층을 대표한다”는 후보 추천단은 대부분 친중국계 재벌이나 기업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들로부터 50%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 인사의 출마가 원천적으로 막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이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후보를 사실상 친중국 인사로 제한하는 조치라 할 수 있음
 - 전인대 상무위는 또한 “행정장관 후보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뒤 중국 중앙인민정부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며 임명권이 중앙 정부에 있음을 못 박음. ‘홍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만 중앙인민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홍콩 민주운동가들은 2017년부터는 행정장관을 시민의 ‘보통 선거’로 선출할 것이라는 2007년 약속을 중국 정부가 저버렸다고 비난하며, 시민들의 항쟁을 예고함

■ 홍콩 대학생 동맹휴교

- 대학생 연합 조직 '학련(學聯, 香港專上學生聯會)'과 고등학생 연합 조직 '학민사조(學民思潮)'는 9월 22일 동맹휴교를 시작하며 전인대 상무위의 홍콩 정치개혁 관련 결정에 항의하기로 함. 운동의 목표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의 홍콩 행정장관 선거방식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정치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

- 수만 명의 학생들이 심야집회를 갖은 뒤 28일 앞당겨 점령 운동이 시작되었고,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선 정부 총부를 점령했지만 경찰의 최루탄 진압을 당함.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자 시위자들은 우산으로 이를 저지했고, 수만 명의 홍콩시민이 거리로 나와 학생들을 응원하며 애드머럴티(金鐘), 완자이(灣仔) 일대가 마비됨. 29일 새벽 만 명이 넘는 시위자들이 여전히 센트럴(中環), 애드머럴티(金鐘) 일대를 떠나지 않았고, 시위지역은 코스웨이베이(銅鑼灣), 몽콕(旺角) 등지로 확산됨
- 홍콩 정부는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고 또한 10대 청소년을 포함하여 시위대 75명을 연행하였으나 이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불러와 이후부터 강경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임

■ 일상화된 시위, 안개 속 정국

- 시위자들의 행정장관 사퇴요구 마지막 기한이 되기 전인 10월 2일, 홍콩 행정장관 령춘잉은 기자회견을 소집하여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함. 그러나 대표를 파견해 학생들과 정치개혁문제에 대해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둠
- 센트럴 운동 측과 친중 단체 간의 충돌이 격화되자 정부와의 대화가 미뤄짐. 홍콩정부가 시위자들에게 제안한 최후 통첩기간이 되자, 학생들이 부분 양보하여 일부 점거한 공간에서 철수함. 국면이 완화된 듯이 보였고 일상도 점차 정상을 회복해감. 학생 지도자들은 항의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홍콩정부의 대화 건의를 받아들임
- 10월 10일 학생운동 지도자인 조슈아 왕이 독일 총리에게 홍콩민주운동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함. 중·독 양국 정부의 협상회의가 금요일 정오 베를린에서 거행되었는데,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독일 총리에게 홍콩의 일은 중국 내정이라고 재차 강조함

-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홍콩 시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지만,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법에 의한 처리'를 주문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일국양제'를 고수한다는 발언을 함
 - 한편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의 여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SNS 서비스를 차단하고 중국 내 인터넷과 언론에서 홍콩 시위에 대한 내용을 검열하는 한편, 외신의 홍콩 관련 보도를 차단하는 등 언론 통제에 나섬
 - 학생회 연합체인 학련은 중국 중앙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대표인 알렉스 차우(周永康) 비서장은 “중국 군대가 출동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팽팽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2. 시위의 배경과 홍콩의 불평등

- 이번 점령 운동은 이미 2013년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거의 수그러들었던 점령 운동의 분위기는 최근 베이징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다시 홍콩학생의 저항을 불러왔고, 이로써 점령 운동이 다시 되살아난 것임
 - ‘센트럴을 점령하라(Occupy Central)’는 원래 베니 타이(戴耀廷) 홍콩대 교수(법학)와 찬किन만(陳健民) 중문대 교수(사회학), 그리고 추이우밍(朱耀明) 침례교 목사가 2011년 3월에 공동 설립한 단체임. 이들은 2013년 초 ‘시민불복종(公民抗命)’을 슬로건으로 하여 중국 정부가 제정한 2017년 행정장관 선거 후보자 추천방안에 반대하자고 발기함
 - 원래 센트럴 점령 운동의 주도자들은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평화롭고 이성적인 대화와 시민투표절차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행정장관 선거를 생취하려 했음. 이들은 센트럴 점령이 마지막 수단이며 홍콩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시민투표를 통해 반영된 홍콩인들의 열망에 대해 베이징 정부는

오히려 강경한 자세로 이러한 요구를 묵살했고, 배후에서 “보통선거 유지, 점령운동 반대(保普選, 反占中)”란 운동을 벌이며 80만 명의 서명을 동원함. 또한 공산당에 반대하는 인사들과 의원들에 대해 불법자금거래를 혐의로 수사를 벌이기도 함

- 또한 이번 시위가 확산된 배경 중 하나는 97년 홍콩 회귀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경제적 불평등과 관료 부패,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며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현실에 대한 불만 등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번 홍콩 시위의 쟁점은 ‘보통선거’이지만, 많은 홍콩인들은 경제 문제가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생각함. 즉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은 홍콩 시내 밖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소득격차와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짐. 한 시민은 “우리 세대는 돈도 없고 집도 없다. 이제 자유조차 없어지려 한다!”고 외침
- 홍콩은 영국 식민지 시절 자유방임정책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경제체 중의 하나가 되었지만, 수십년 동안 불평등이 악화되어 지니계수가 0.54에 이르며 7백만 주민 가운데 1/5 가량이 빈곤층이고 소득격차가 가장 큰 지역 중의 하나임. 스위스 <Credit Suisse>의 연구에 따르면 올해 홍콩인구 중 가장 부유한 10%가 77.5%의 부를 갖고 있으며, 이는 2007년의 69.3%보다 더 높아진 수치임
 - 부동산 역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인상됨. 자문회사 <Demographia>에 따르면 홍콩의 평균 주택가격은 홍콩주민 연간소득의 14.9배로, 런던의 4.7배, 샌프란시스코의 9.2배보다 훨씬 높음. 대륙 여행객들이 몰려와 일용품의 가격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음
- 극심한 빈부격차와 미래에 대한 절망에 거리로 내몰린 홍콩의 청년들은 자본을 규제하고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희망함
 - 홍콩정부는 경제성장 가속화로 청년들에게 사회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장담하지만, 홍콩인들은 과거 경제성장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소수의 부호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음

- 링춘잉 행정장관은 영국 <파이낸스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히 개방된 선거제도는 저소득층으로 사회가 기울어져 포퓰리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힘. 이렇듯 홍콩 권력자들은 경제계 인사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 강조하지만, 많은 시위참가자들은 정치개혁을 통해 경제적인 불평등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시위자는 “1997년 이후 홍콩경제는 줄곧 고속으로 발전했다. 경제가 발전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공을 향유하지 못했다.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오히려 소수만 먹여 살렸다. 그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우리는 더욱 더 가난해졌다. 우리의 부담도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질 것이다”라고 외침

● 홍콩 시위의 저변에 깔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홍콩판 재벌’을 향하기도 함

-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홍콩 재벌들이 친중 행정장관을 뽑는데 도움을 줬다는 인식이 커짐. 현행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약 80%의 친 중국계 인사들로 구성된 1,200명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됨. 이중 상당수가 재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
- 10월 20일로 시위 23일째를 맞은 홍콩 시민들이 정부뿐 아니라 재벌들을 향해서도 시위를 벌어나가고 있음. “우리는 누구의 노예도 아니다. 우리는 리카싱(李嘉誠)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구호처럼 홍콩 재벌들에 대한 반감도 극에 달함
- 홍콩에서는 소수의 재벌 가문이 부동산 시장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소매업은 물론 전기와 가스, 교통 등 공공 영역까지 장악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족경영체제를 이루고 있음. 거대한 부동산을 가진 5개 회사가 민간 주택시장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고, 두 개의 재벌소유 체인이 코카콜라 등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슈퍼마켓, 소매점 등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음
- 반면 홍콩 대학 졸업자의 초봉은 19만8천 홍콩달러(약 2,700만원)로 지난 17년간 연 1%씩 상승하는 데 그쳤고, 임금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 등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젊은 층과 중산층의 분노가 폭발

한 것이 이번 시위의 한 배경으로 지적됨

- 최근 홍콩에선 각종 사회항쟁과 좌우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남
 - 지난 몇 년간 고속철 분쟁, 부두 파업, 신계 동북개발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홍콩사회는 좌와 우로 갈라져 사회적 분열 양상이 극심하게 나타남. 사회는 분열되고 서민은 가난해지고 집값은 폭등하고 자유는 제한되며 삶의 조건이 점점 열악해짐
 - 게다가 홍콩 회귀 이후 중국색이 점점 강해지며 홍콩의 특색을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함. 많은 홍콩인들이 자신들을 중국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말과 생김새가 다를 뿐 아니라 경제적·문화적 수준의 차이도 큼
- 또한 홍콩 매체는 이미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중국경제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 거의 모두가 친중 매체의 성격을 띠며
 - 홍콩 매체는 그동안 대부분이 기업에게 팔렸고, 이들 기업 중 90%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체 대표의 절반 이상이 인대 아니면 정협 대표
 - 대륙경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대해져 홍콩매체에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홍콩의 다양한 목소리는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옮겨감

3. 쟁점 1: ‘일국양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 “일국양제, 50년간 불변,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함(港人治港).” 이것이 중국 정부가 홍콩인에게 준 50년간의 보증수표였음
 - 그러나 ‘하나의 국가, 두 가지 제도’를 둘러싼 해석은 중국과 홍콩 간의 인식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줌. 과연 ‘일국양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국’과 ‘양제’는 어떻게 병존할 수 있는가? ‘양제’ 중의 하나인 홍콩의 제도가 ‘일국’의 방침에서 벗어날 때 ‘양

제'의 원칙은 어떻게 되는가? '일국'의 논리로 '양제'에서 보장하는 자치의 원칙을 부정할 수 있는가?

■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석

-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의 법적 근거를 <홍콩기본법>에 두고 있음. 홍콩기본법은 1990년 전인대에서 채택되었고, '일국양제'의 원칙과 "홍콩은 홍콩인이 통치한다"는 구호와 더불어 홍콩에 광범위한 자치가 부여됨. 중앙정부는 홍콩의 외교와 국방 업무를 담당하는 대신, 홍콩은 내치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
 - <홍콩기본법>에서는 행정장관과 입법회 두 기구에 대한 선거 방식에 대해 보통선거를 즉각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함
 - <홍콩기본법>에서는 홍콩 특별행정구가 사법 최종심사권을 갖는다고 보장하지만, 기본법 158조 규정에 따르면 기본법에 대한 해석은 중국인대 상임위가 홍콩 지역의 법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해석한다고 되어있음. 즉 중앙관리업무나 중앙과 특별행정구 간의 관계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여전히 인대 상임위에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근거에 따르면 '기본법'을 어떻게 해석하든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본법 안에서 홍콩인에게 부여한 모든 권력(혹은 권리)은 중앙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회수해갈 수 있는 것임. 즉 일국양제에 대한 해석은 인대 상임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홍콩인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

■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

- 『홍콩특별행정구에서의 일국양제의 실천』 백서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고도자치권은 고유한 것이 아니며 그 유일한 근거는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홍콩특별행정구가 향유하는 고도자치권은 완전한 자치가 아니며 분권 역시 아니며, 중앙이 부여한 지방업무관

리권이다. 고도자치권의 한도는 중앙이 얼마만큼의 권력을 부여했는지에 달려있고, 홍콩특별행정구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향유하는지에는 ‘잉여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백서에서는 ‘양제’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면서 중국은 단일국이고 결국 홍콩은 중앙정부의 명령을 듣는 ‘특별행정구’일 뿐으로 ‘국가 속의 국가’라는 망상을 갖지 말 것과, 현재 향유하는 모든 자치는 중앙에서 부여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 ‘일국양제’에 대한 홍콩인의 이해

- 이러한 설명은 ‘일국양제’에 대한 홍콩인의 이해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
 - 백서에서의 규정에 대해 많은 홍콩인들은 일국양제에 앞으로 ‘일국’만 존재하고 ‘양제’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이에 따라 백서가 발표되자마자 홍콩 사회가 동요함.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홍콩인들의 소망과는 달리 중국 정부의 해석 안에는 당과 국가가 우선함
 - 홍콩 시민들은 “홍콩 기본법엔 민주주의 추구라는 기본 정신이 있으며, 법은 시민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인식함. 즉 법은 통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는 것
- 홍콩대학 민의연구계획에서 9월초 1,000명의 홍콩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홍콩정부에 대한 신임도는 41%에서 36%로, 중앙정부에 대한 신임도는 34%에서 3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국양제’에 대한 신뢰도는 6월 조사 당시의 47%에서 38%로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46%에서 5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보면 일국양제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는, 홍콩 회귀 이후 17년 간 있었던 여러 정치적 사건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변형되어온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홍콩인 간의 인식차가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인식차를 만들어낸 중요한 사건은 다음과 같음

- 1) 89년 천안문 사건. 중국 정부의 학생운동 폭력진압에 대한 홍콩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으며, 100만 명에 달하는 홍콩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임. 대다수의 홍콩인들은 곧 회귀되는 ‘조국’이 학생들에게 창을 겨누는 폭력정권이라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비분강개함
- 2) 2003년 7·1 시위. 50만 명의 홍콩인들이 거리로 나와 중국 정부의 <기본법>23조(국가안전)의 입법을 보류하도록 하는데 성공함. 이 법은 홍콩인의 인권과 자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왔고, 애초에 5만 명 정도 참여할 것이라 예측됐지만 50만 명이 참가함. 7.1시위 이후 중국은 홍콩정책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함
- 3) 2004년 4월 6일 전인대는 기본법에 대해 “홍콩의 일은 우선 중앙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두 번째 해석을 내놓음. 이에 따라 30여만 명의 홍콩인이 거리로 나와 행정장관과 입법회의 보통선거를 요구함. 당시 행정장관인 동젠화(董建華)는 결국 2005년 물러났지만, 중앙정부는 정치제도 분야에서의 빠른 개혁을 거부함
- 4) 2012년 18대 연설에서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은 홍콩에 대한 방침의 기본 목적은 “국가주권과 안전, 이익을 보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힘. 이로써 양제보다 일국을 우선시하는 일국양제의 특징을 확정함. 그러나 같은 해 중국 공산당을 미화하는 ‘애국교육’을 홍콩 정부가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다 고등학생들의 반대 시위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됨
- 5) 2014년 8월 31일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보통선거를 확정하자 홍콩시민들의 센트럴 점령 운동과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됨.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임

-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은 문제는 ‘일국양제’의 핵심적인 문제임

- 일국이 양제보다 높은가, 양제가 일국보다 높은가?
- 홍콩에 적용되는 '일국양제'는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대만과의 통일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홍콩 문제의 해법은 '일국양제'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4. 쟁점 2: 홍콩의 민주화 운동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

-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홍콩인들의 자치 의식은 중앙의 거대권력이라는 '중국 요인'에 대한 도전의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며,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민주 의식이나 자결 의식이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라 할 수 있음
 - 홍콩인들이 반대해 온 것은 특구에 대해 점차 줄어드는 '자치'에 관한 것이며, 그동안 대륙의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의 자치를 침범하는 것에 싸워옴.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옴
 -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는 자유선거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민주화 시위로 규정하지만, 이는 외부적 시각에 불과하며, 오랫동안 홍콩은 자신의 자치와 자결권을 요구하며 투쟁해 옴. 홍콩인 스스로 홍콩인을 통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결 조건은 스스로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선거에 있고, 이번 시위는 이러한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은 홍콩시위에 서방의 배후가 있다고 호도하고, 서구는 중국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난하지만, 주체로 서고자 하는 홍콩인의 정신은 중국의 주장처럼 서구 식민지 시절에 세뇌되어 온 것도 아니고, 서구의 주장처럼 중국을 부정하며 체제를 뒤엎겠다는 것도 아님

■ 홍콩의 민주화 역사

- 전후 홍콩에서 태어나 자란 세대는 1949년 이전 대륙에서 건너온 부모세대와는 다르게 홍콩에 대해 ‘귀속감’을 갖고 있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식민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며 학생운동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사회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음. 8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투쟁은 민생 개선의 사회운동으로 확대됨
 - 그러나 1979년 덩샤오핑이 1997년 홍콩 회귀를 표명하면서 홍콩문제를 두고 중국과 영국 양국 간의 협상이 시작되자 시민사회의 초점은 점차 민생의제에서 인권이나 민주주의제로 전환되어감
- 정계와 사회 조직 간의 폭넓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컨센서는 홍콩의 자유와 인권, 법치를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에 따라 1986년 민주정치제도촉진연합위원회(民促會)가 만들어졌고 1988년에 입법국에 직선 의석을 쟁취하려 함. 이를 홍콩 민주운동의 기점이라 볼 수 있음
- 이후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홍콩에서는 ‘민주로 공산당에 항거하자는 심리가 만연해짐. 이로써 시민사회는 더욱더 민주화의 진전에 몰입하여 홍콩민주민생촉진회(民協)와 홍콩민주동맹(港同盟) 등의 참정조직을 설립함
- 1994년 민주당이 창당되고 리추밍(李柱銘) 주석 이외 핵심 멤버는 대부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채워짐. 민주당은 1995년에 입법국 선거에서 승전보를 올렸지만, 이후 당내 분열과 시민사회 간의 알력으로 민주운동이 병목상태에 처하게 됨
- 2003년 7·1시위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돌파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음. <기본법> 23조 입법은 홍콩시민들에게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안겨줌. 여기에 홍콩정부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결합되어 23조 입법 반대운동은 ‘동철회 사퇴’운동, 나아가 ‘두 개의 보통선거 쟁취’(2007년 행정장관 직선, 2008년 입법회 직선 전면화) 운동으로 확산됨

- 홍콩민주운동의 주도권은 정당에서 센트럴 점령운동으로, 다시 학생들로 이동되어 점차 급진화되는 양상을 띠며, 사실 홍콩체제라는 제도적 조건에서 홍콩 정치에는 온건한 반대파가 설 자리가 별로 없음. 그것은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면서 홍콩의 자주나 자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고, 이는 어디까지나 대륙의 양보나 시혜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를 기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 홍콩사회는 2003년 기본법 23조 입법 철회와 2012년 ‘애국교육’ 도입 유보 등의 민주운동을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날로 발전해옴
 - 홍콩 시민들은 일련의 사회운동을 통해 민간의 힘이 정부를 감독하고 사회개혁을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식해옴. 이에 따라 많은 민간조직이 생겨났고 환경이나 공동체 보육에서의 투쟁을 이어나가 시민사회가 매우 활발해짐
 - 홍콩 시민사회의 기본 철학은 자유주의 사상과 긴밀한 관련이 깊음. 어떻게 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것인가가 자유주의의 핵심 과제라고 볼 때, 정부를 감독하려면 단체를 결성하여 정부를 견제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 7·1시위나 현재 센트럴 점령 시위에서는 각종 시민단체 회원의 규모나 조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상호 교류하는 사회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응집력과 정체성이 사회동원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홍콩은 인구가 매우 밀집된 사회로 가족, 친구, 동료 간의 교류나 모임이 매우 빈번한 곳이며, 인터넷의 보급도 매우 광범위함
 - 네트워크화된 시민사회는 청년들을 쉽게 동원하여 정치에 참여하게 만듦. 그러나 전통적인 조직 논리와는 다르게, ‘탈중심화’되고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급진화되고 폭력화되는 경향도 존재함

■ 중국과 홍콩 시민사회의 상호영향

- 홍콩 시민사회의 성장과 확대가 홍콩 회귀 이후 중국 내륙에도 영향을 미침. 특히 광둥 연해 일대는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홍콩 시민사회의 시범효과가 더욱 뚜렷함
 - 과거 십수년간 홍콩 대학과 시민사회조직은 자원, 이념, 업무모델,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 모두 중국 공익영역의 발전을 촉진해왔음. 많은 자원을 투입해 중국에서 빈곤과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일부는 중국NGO를 지원해옴. 이들 NGO는 환경, 교육, 보건, 여성, 노동 등의 분야에서 커다란 공헌을 함
 - 특히 지역 공동체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홍콩이 많은 영향을 미침. 대표적으로 홍콩중문대학의 시민사회연구센터는 매년 백여명의 중국NGO 활동가를 홍콩으로 초청하여 단기반 과정을 진행하며 많은 활동가를 키워냄. 이러한 과정에서는 조직 훈련, 재무관리, 활동가 양성 이외에도 시민참여의 이념을 강조함. 중국 남부의 많은 노동조직과 중국 각지의 인권 변호사들은 모두 홍콩 관련 단체의 지원을 받아옴

5.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강경하되 법에 따라”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투표권조차 갖지 못했던 홍콩에게 ‘일국양제’라는 구도 속에서 투표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홍콩인들의 저항을 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음. 그러나 중국과 홍콩 사이에 ‘보통선거’나 ‘애국’, ‘민주’ 등의 개념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차가 존재함
 - 한 조사에 따르면 홍콩인들은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나 중화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비교적 뚜렷한 반면 국가 이데올로기나 국가의 성과, 애국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분화되어 나타남. 중국의 경제성이나 국제정치 영향력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지만, 민주상황이나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음. 국가주권이

나 민족문제 등에 비해서 인권, 자유, 민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게 나타남

- 중국 정부의 눈에는 서구의 편에 서서 중국을 비방하고 중국의 인권과 민주를 위해 다른 나라 정부에 호소하는 것이 ‘애국하지 못한 행위’겠지만, 많은 홍콩인들은 중국의 민주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을 위한 ‘애국적 행위’라고 인식함

● 중국 지도부는 홍콩시민이 실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민주’와 같은 가치를 위해 오랫동안 저항할 리 없다고 봄. 그러나 홍콩인이 생각하는 ‘민주’는 누구에게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획득하는 것임

- 중국은 대륙과 홍콩, 두 지역이 제도가 다르지만 똑같은 문화적 혈통을 지녔기 때문에 내륙인을 통치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홍콩인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함

- 특히 회귀된 지 17년 동안 두 지역의 연계가 더욱 밀접해져 전인대에서 결정하면 일부의 시민과 학생들만 저항할 것이라고 판단함.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홍콩을 완전히 내륙의 한 도시 지역처럼 처리하려 했음

- 중국 정부 입장에서 민주와 권리는 중앙권력에서 지방민에게 하사하고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함. 백서에서도 중앙에서 홍콩에 얼마만큼의 자치권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홍콩이 그만큼의 자치권을 누린다고 명시함. 그러나 홍콩인에게 민주는 실질적인 정치적 권리지 누구에게 부여받는 것이 아님

● 홍콩은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식 민주’ 실현 등 현재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모든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지역임. 또한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가 홍콩 지역에 그치지 않고 중국 남부지역으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음

- 홍콩에서 가까운 선전시에 거주하는 한 중국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 홍콩 시위의 상황을 전달하다 공안국에 의해 ‘사회 소란죄(尋衅滋事罪)’로 형사구류되기도 함

- 홍콩을 어떻게 통제 관리하고 포용하는지에 따라 티벳이나 신강

등 다른 지역에도 시범, 확산 효과를 갖음

- 중국 정부는 이번 홍콩 시위를 ‘색깔 혁명’으로 규정하며, ‘중국식 민주’를 정당화하는 여론전을 주도해나감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0월 4일 1면에 논평을 실어 “극소수가 홍콩 시위를 이용해 중국 본토에 ‘색깔 혁명’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백일몽에 그치고 말 것이다”라고 비판함
 - <인민일보>는 5일에도 “시위대는 절대 다수 홍콩 시민의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며 “중국 정부야말로 일국양제 원칙과 민주를 동시에 지키는 홍콩 민주화의 가장 큰 조력자다”고 주장함
- 최근 개최된 18기 4중전회에서 중국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강조함. ‘제2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보다 빠르게, 중국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끌고나갈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전면개혁’ 추진의 근거를 ‘법치’에서 찾고자 함
 - 이러한 법치 강조가 노리는 것은 전면개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부패를 척결하는 것에 있지만, 각종 사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사회통제를 통한 안정 유지라는 목표도 갖고 있음
 - 이번 홍콩 도심 점거 시위와 관련하여 중국은 2003년과 2012년 시위 때와는 다르게 “세 번째 양보는 없다”는 방침을 세워둠. 중국 지도부는 10월 초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국가안전위원회에서 홍콩 문제가 조기에 종식돼야 한다며 양보 불가론에 뜻을 모았다고 함

6. 평가 및 전망

- 홍콩의 정치적 쟁점은 서구에서 말하는 ‘독재’ 대 ‘민주’, 혹은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식 민주’ 대 ‘색깔혁명’의 구도가 아니라, “일국이나, 양제냐”의 구도에서 파악할 수 있음. 즉 ‘하나의 국가’ 원칙을 지키

면서도 홍콩의 자치와 민주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오랫동안의 고민과 사회적 논쟁이 축적되고 폭발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중국이 국가이익인 '일국'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홍콩은 자치, 즉 '양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의 민주의식은 홍콩의 문제를 홍콩인 스스로의 힘과 방식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치의 의식에서 발전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음
- 중국 지도부는 '중국부상'으로 더욱 자신감을 얻었고 발전을 위한 안정 유지라는 확고한 정책의 틀 안에서 홍콩의 문제를 해결하려 함. 반면, 홍콩은 회귀 이후 중국과는 구별되는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홍콩의 발전을 위해 회복되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점점 증가되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말하는 '일국양제'로는 강경해진 양측의 입장을 좁히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긴 매우 어려워 보임

- 홍콩의 선택과 중국의 대응은 단순히 홍콩의 미래 뿐 아니라 중국의 국내정치(중국식 민주), 대만문제(일국양제), 나아가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중국의 대국화)과도 관련됨

- 중국 지도부가 이번 홍콩 시위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지에 따라 향후 중국 내외의 정치적 환경과 체제 특성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시위는 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홍콩시민의 불안과 저항을 불러왔고, '일국양제' 방안에 대한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 향후 대만과의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폭력진압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강경한 독재 국가'라는 이미지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이 만들어 나가려하는 '중국식 민주'의 핵심은 과거 사회주의 식도 서구식도 아닌 중국 스스로에 의한 민주로, 서구의 일방적인 방식의 수용이나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자주적이고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원리임

- 그동안 서구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민주의 '다양성'과 '자생성'을 강조해온 중국이 어떻게 내부 민주의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됨. 대외적으로는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중앙권력이 설정한 범위를 강요한다면 그동안 중국이 강조해온 '중국식 민주'의 원리에 스스로 위배되는 셈임
 - 따라서 이번 홍콩 시위에서 어떻게 해결의 접점을 찾을 것인가는 향후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적 원리라는 모순된 속성을 어떠한 형식으로 조화시켜 스스로 말하는 '중국식 민주'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전망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홍콩인들의 민주선거에 대한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임
 - 센트럴 운동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들이 대립·분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단체와의 어떠한 형태의 연계나 지원도 모두 해외 배후와 조종세력이 있다는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중국의 여론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함
 - 또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위상이나 영향력이 강해진 중국 정부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며, 강력한 진압으로 국제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더라도 홍콩문제로 인해 혼란을 가져와 '전면적 개혁추진'에 차질을 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영국 식민지 하에서 아시아 자본주의의 모범사례로 발전한 동시에 자본주의의 첨예한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홍콩은 현재 중국 없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 보임
 - 시위대 역시 홍콩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음
 - 이번 시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재벌과의 협력을 통해 홍콩을 통제하는 상황이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홍콩 시위는 중국에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많은 과제를 안겨줄 뿐 아니라, 향후 중국의 체제와 통치 방식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전면적 관치권’ 대 ‘고도의 자치권’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법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중국이 홍콩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 현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홍콩인들도 수용 가능한 ‘새로운 일국양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는 향후 중국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강대국’으로 나아가면서도 내부적으로 ‘전면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陳建民, “香港的公民社會與民主發展”, 『二十一世紀』2011年12月.
“經濟不平等加劇香港政治分歧”, <http://www.ftchinese.com/story/001058726?full=y>
“媒體遭收編, 多元觀點消音”, <http://www.cw.com.tw/article/article.action?id=5061447>
“深圳市民汪龍因轉發香港占中帖被刑拘”,
http://www.bbc.co.uk/zhongwen/simp/china/2014/09/140930_shenzhen_wanglong_hk
“香港人不愛國嗎?”, <http://cnpolitics.org/2014/09/hk-patriotism/>
“彼此誤判導致‘占中’僵局”, <http://www.ftchinese.com/story/001058678>
何明修, “香港民主運動的台灣觀察”, <http://opinion.cw.com.tw/blog/profile/274/article/1904>
黃丞儀, “七一之後:「一國兩制」的夢醒時分”,
<http://opinion.cw.com.tw/blog/profile/103/article/1585>